



옛 인천우체국, '우정통신박물관' 변신은 역사

우정통신 문화를 지키는 인천...우체국 보존

(구)인천우체국을 우정통신박물관으로 변신을 시켜 인천의 정체성을 지키고 활용될 전망이 나와 많은 사연을 전달한 우체국의 역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6월 취득한 (구)인천우체국(중구 제물량로 183)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우정통신박물관으로 활용키로 하고, 오는 23일 주민설명회(14시·신포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관·별관·수위실로 구성된 (구)인천우체국의 각 건물은 1923년·1987년·2003년에 건축됐다. 이 중 문화재로서 가치를 갖는 본관 건물은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바 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된 본관은 'ㄷ'자 모양의 건물로 연와조 벽

체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에 주 출입구가 석재로 만들어진 혼합구조 형태를 가지며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목구조였던 중앙 중정 부분 1층은 6.25 한국전쟁 당시 훼손돼 1954년 조적조 벽체에 목구조로 증축된 바 있으며, 최근 2003년 대수선 공사 시 철거 후 경량철골구조로 대체 됐다.

1923년 건립 이후부터 2019년 정석빌딩 임시청사(인하대병원 옆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우체국으로 사용돼 온 (구)인천우체국은 우리나라와 인천우체사의 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의 근대식 우편제도는 1884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시행은 이후 전국 각지에 우체사가 설치되면서 부터다. 이런 역사의 근간은 인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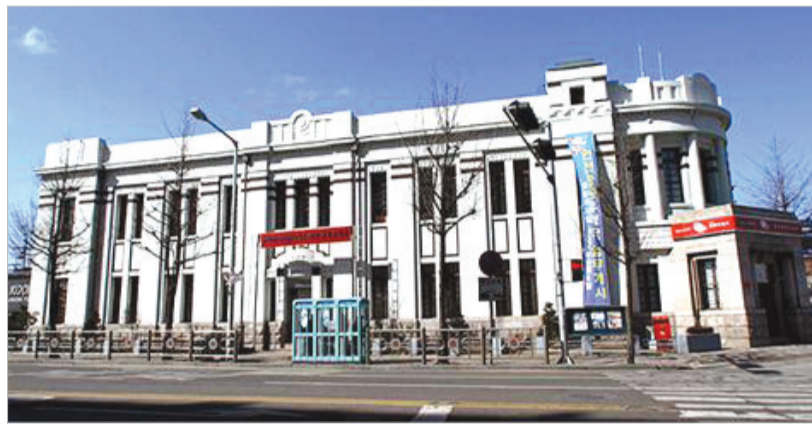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1884년 우정총국과 함께 인천분국이, 1895년 한성과 인천에 최초로 우체사가 설치됐다.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 우편국에 편입됐다가 우편국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1923년 인천우편국을 신축 후 최근까지 우체국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6월 건물을 취득한 인천시는 건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우정통신박물관으로의 활용을 잠정 결정했다. 1923년 기준으로 원형을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원형 보존의 원칙 아래 역사성이 부족한 별관과 수위실·본관의 중정부는 철거하



고, 2019년까지 우체국으로 사용돼 온 실내는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구)인천우체국은 개항기 인천의 역사성과 우리나라 우편·통신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높아 우정통신박물관으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항장 인근 다양한 박물관

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제물포 르네상스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은 물론 중구 원도심 지역의 관광 자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인천시는 5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투융자 심사, 공공건축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활용 용역 등을 거쳐 2027년 개관할 예정이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 서해5도 도시지역 '인천하늘수' 22만 병입 지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수 고갈 및 강수량 부족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서해5도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병입 인천하늘수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해5도 도시지역 최근 5년간의 섬 지역 평균 강수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물 부족 상황에서 지하수 염수유입 및 성수기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식수량 부

족 등을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도서 지역에 향후 5년 동안 연간 1.8리터(L) 병입 인천하늘수 22만 5000병(총 40만 5000리터)의 먹는 물을 지원해 도서지역 주민들 불편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면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수량을 신청받은 뒤 남동부수도사업소와 남동정수사업소에서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수량을 결정

하며, 육로로 이어지지 않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운반 용역을 통해 깨끗한 병입하늘수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해5도 도서 지역 주민 여러분도 불편 없이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입 인천하늘수는 고도정



병입 인천하늘수 지원을 위해 상차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수처리를 거쳐 친환경 1.8리터 페트병에 담아 단수 및 재해 지역과 관내 도서 지역의 비상 급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8월

에도 원활한 새만금 잠버리대회 추진을 위해 인천하늘수 2만 7000병을 지원한 바 있다.

/문미순 기자

데스크칼럼



김양훈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국내각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층은 총선의 열기가 식지도 않은 시점에서 너무 나간다고 국민 시선은 곱지 않게 보고 있다.

박지원 22대 총선 당선자가 거국내각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벌써 야당의 갑질이나니하는 시각도 있다. 또 야권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국무총리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총선 승리를 훈장처럼 현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로 보인다. 거대 야

22대 총선 당선자, '거국내각' 무슨 말?

당이 된 것은 정치를 잘해서 표를 주지 않았다. 의석수를 내세우는 모습은 승리에 도취한 느낌을 연상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심판을 받았다고 정부 흔들기가 서서히 시작됐다. 야당도 심판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어도 유권자 분포도를 분석하면 비례에서 참패했다.

국회의원 당선 과정은 지역구 선거에서 한표를 이겨도 당선자가 된다. 실제 유권자 표심을 비교하면 비례대표 투표는 민주당이 국힘에 패한 것은 국민이 양쪽 모두를 심판한 것이다.

양당 비례대표만 놓고 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 위성 정당 국민의미래(약 10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이다.

이어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으로 득표

수가 나타났다. 총선 정당 투표수 2834만4519표 중 4.4%인 130만 9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는데 국민의 뜻은 여기에 있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투표수다.

왜 이런 무효표가 나왔는가 여야가 싫다는 유권자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에 승리하고도 위성정당 비례대표에서는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국힘에 패했다.

조국당은 민주표라고 한다면 해석은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은 조국을 받아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조국당에 표가 간 것이다. 민주당 야권표라고 생각하면 아전인수 해석으로 생각된다.

양당 지지호소에도 국민 표심은 선출직과 비례대표 선택에서 극명하게 표를 주었다. 정치를 잘하라는 메시지가 주문됐다. 국민 유권자를 가볍게 보면 무시한 대가(代價)는 처절하다.

조국당 선택은 조국이란 인물과 이재명, 이건희 여사 등 키워드가 인식될 만큼 예민해진다. 국민의 조국 선택은 '그 나물에 그 밥' 범죄 의혹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은 분노했고 충격적인 표심의 방향타는 조국에게 향했다. 국민 반발 뜻대로 해석된다. 기득권 양당을 심판한 꾸지람이 대단하다. 제3 정당이 주도권을 잡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21대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다. 실제 따지면 국민의 힘 지지율은 약 45%에 해당한다. 민주당 완승이라고 하는데 비례에

서 졌기 때문에 반쪽짜리 승리로 해석될 수가 있다.

국민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22대 4년 국회는 협치를 잘해야 한다. 중간 지방선거는 2년 후 있다.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의 눈은 전부 보고 있기에 평가는 냉혹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권 대표 1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를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국민의 주문은 충돌의 정치에서 소통의 정치로 바꾸라고 한다.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야당 대표들을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법과 원칙은 정치와는 너무도 결이 다르다. 범죄혐의는 재판부 판단에 맡기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론 정치가 법보다 상위일 때가 있다. 소통과 협치는 정당의 공동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에 반대가 아닌 상식 정치가 자리를 잡도록 여야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